2017년 업무 추진계획

2017. 1.



행정자치부

목 차

Ⅰ. 일반 현황 ····· 1

Ⅱ. 지난 4년간 평가 ····· 5

Ⅲ. 정책여건 및 목표 ····· 11

Ⅳ. 2017년 중점 추진과제 ····· 15

1. 국민 생활 속 정부3.0 실현 ····· 16

2.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조직관리 ····· 21

3. 미래 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····· 2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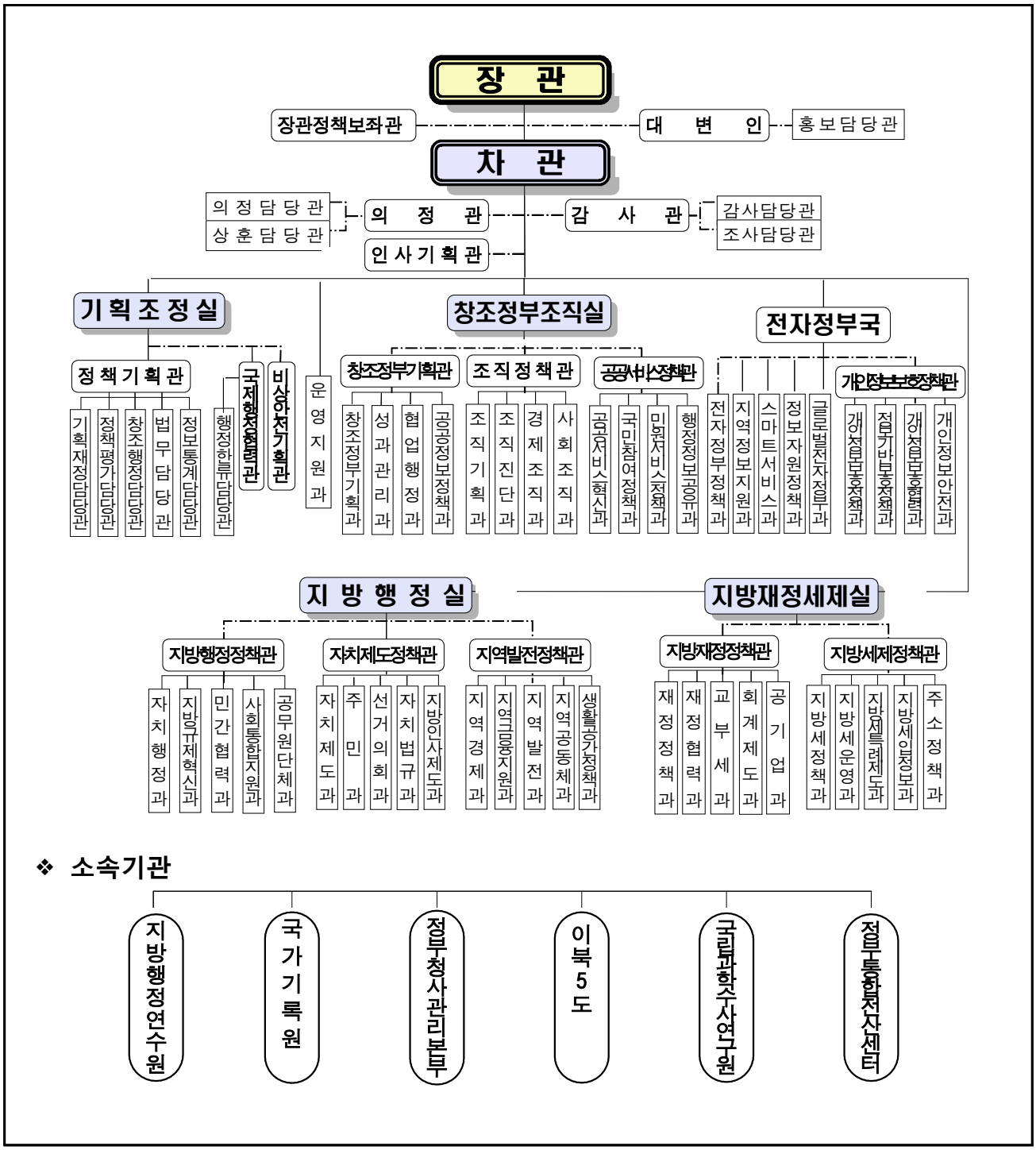
4.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····· 30

5.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 ····· 36

Ⅰ. 일반 현황

1. 기구 및 정원

□ **기구 :** (본부) 1차관, 4실, 1국, 16관, 58과 / (소속기관) 6개



□ **정원 :** 총 2,710명(본부 852, 소속기관 1,845, 경찰위원회 3, 전직대통령비서관 10)

2. 주요 기능 및 예산

□ 주요 기능 (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)

○ 정부조직과 정원관리, 정부혁신, 행정능률, 전자정부, 개인정보보호, 상훈, 국무회의 지원, 정부청사의 관리

○ 지방자치제도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·세제, 낙후지역 등 지원,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, 선거·국민투표 지원 등

□ 소관 법률 : 157개

○ 정부조직법,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, 전자정부법, 개인정보보호법, 지방자치법, 지방공무원법, 지방재정법, 지방세기본법, 상훈법 등

□ 2017년도 예산 : 41조 4,832억원

(단위 : 억원)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예 산 액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>총 계</td><td>414,832</td><td></td></tr>
<tr><td>일 반 회 계</td><td>411,790</td><td rowspan="5">○ 본부집행 : 12,720(3.1%)

○ 지방지원 : 402,112(96.9%)
- 지방교부세* : 396,914
• 보 통 375,775
• 특 별 5,811
• 부동산 15,328
- 국고보조금 : 5,198
* 내국세의 19.24% + 종합부동산세</td></tr>
<tr><td>○ 기본적 경비
- 인 건 비
- 기본경비
○ 지방교부세
○ 사 업 비</td><td>2,433
2,133
300
396,914
12,443</td></tr>
<tr><td>특 별 회 계</td><td>3,042</td></tr>
<tr><td>○ 지역발전특별회계</td><td>3,042</td></tr>
</table>

3. 지방자치단체 현황

□ 지방자치단체 수 : 총 243개

○ 광역자치단체(17) : 특별시 1, 광역시 6, 특별자치시 1, 도 8, 특별자치도 1

○ 기초자치단체(226) : 시 75, 군 82, 자치구 69

※ 행정시 2개, 일반구 32개, 읍면동 3,502개(읍 220 / 면 1,193 / 동 2,089)

□ 지방의원 정수 : 총 3,692명

○ 시·도 의원 : 794명(비례 84명 포함)

○ 시·군·구 의원 : 2,898명(비례 379명 포함)

□ 지방공무원 정원 : 총 302,070명(시·도교육청 제외)

○ 시·도 : 92,095명

○ 시·군·구 : 209,975명

□ 2016년도 재정규모 : 총 184.6조원

○ 일반회계 151.8조원(82.2%), 특별회계 32.8조원(17.8%)

○ 시·도 119.2조원(64.6%), 시·군·구 65.4조원(35.4%)

□ 2016년도 주요 재정지표

○ 재정자립도* : 평균 52.5% ('15년 50.6%)

* (지방세+세외수입 / 지자체 예산) × 100

○ 재정자주도* : 평균 74.2% ('15년 73.4%)

* (지방세+세외수입+지방교부세+조정교부금 / 지자체 예산) × 100

Ⅱ. 지난 4년간 평가

1. 정부3.0 및 조직 분야

□ 정부3.0 가시적 성과 창출

○ **(서비스 정부)** 행복출산·안심상속 등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, 민원24 '나의 생활정보(41종)' 제공 등

- '정부3.0 서비스알리미' 앱 출시('16.8월), 200여개 정부서비스 한 곳에서 안내
- 국민디자인단 전국 확산(382개) 및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 수상('16.2월)

○ **(투명한 정부)**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전면 개방('15년 11개, '16년 22개)

- OECD 국가 중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1위 달성('15.7월)

※ 개방 데이터 활용 앱·웹 개발
('13년) 42개 → ('14년) 395개 → ('15년) 695개 → ('16) 1,057개

- 원문정보공개제도 시행, 전 공공기관까지 전면 확대('16.9월 603개 기관)

○ **(유능한 정부)** 고용복지+센터 설치(~'16년말 70개),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칸막이 없는 협업조직모델 확산

- 행정·공공기관 정보공동이용(총 153종)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
- 식중독 예측(환자수 27% 감소), 공동주택 관리비 분석(10% 절감)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

□ 정부3.0 추진기반 확립 및 확산 가속화

○ **(추진기반 확립)** 정부3.0 비전 선포 및「정부3.0 추진 기본계획」 확정('13.6월)으로 정부3.0 가치 확립

- 공공데이터법 제정('13.10월), 정보공개법 개정('13.11월), 원문정보공개 시스템 구축('15년) 등 법·제도·시스템 정비
- 행정협업 촉진규정 신설('16.4월) 등 범정부 협업 활성화 기반 마련
- 중앙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 대상 정부3.0 평가 실시(535개 기관)

○ **(홍보·확산)** 「정부3.0 체험마당*」('15.5월, '16.6월·11월)을 통해 국민 체감 제고, 국민 인지도 지속 향상**

* 정부3.0 대표성과 전시, 14만여 명 방문

** ('14.7월) 34.6% → ('15.12월) 47.2% → ('16.12월) 72%

- 「정부3.0 글로벌포럼**」('16.11월) 개최로 국제적 확산

※ 4개 국제기구, 75개국 300여 명 참가

□ 효율적 정부조직 및 인력 관리

○ 국민·현장 중심으로 일선 집행기관(지방청·사무소 등) 합리적 개편

※ (우정사업본부) 조직·인력 효율화를 통해 집배인력, 지방청 금융사업에 재배치 등

○ 경제 활성화, 재난안전, 민생 치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인력 보강, 기능 감소 분야 인력 감축·재배치*

※ 통합정원(매년 각 부처 정원 1%) 활용하여 국정 현안에 재배치

○ 공직사회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

- 육아휴직 시 100% 결원 보충, 시간선택제 공무원 활성화를 위한 소수점 단위 정원제 도입 등

○ '신설기구 성과평과제' 도입('15.5월), 책임운영기관 확대('16년, 49개)

2. 전자정부 분야

□ 스마트 전자정부 실현

○ **(추진기반 확립)** "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(Enjoy your e-Gov) 구현"을 위한 「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」 수립('16.4월) 및 실행계획 마련('16.9월)

- 범부처 민관합동 '전자정부추진위원회' 신설('16.4월)

○ **(업무환경 혁신)** 全 부처 업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(~'17년, 740개) 스마트워크센터(총 18개)*, 영상회의 활성화**

* (이용자) '13년 57,347명 → '14년 100,750명 → '15년 114,351명 → '16.11월 122,069명

** (개최실적) '13년 13,452회 → '14년 36,769회 → '15년 76,353회 → '16.11월 154,113회

○ **(모바일 행정)** 모바일 행정서비스 확대*, 보안이 확보된 모바일 메신저 '바로톡' 보급·확산

* ('14년) 77개 → ('15년) 108개 → ('16.11월) 154개

□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 강화

○ **(개인정보보호)**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('13.8월),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처벌 및 피해구제 강화*('15.7월) 등 법령·제도 개선

* 징벌적 손해배상제(손해액의 3배 이내), 법정 손해배상제 도입

-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(166개), 자치법규(6,883개) 일제 정비
- 「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」 마련('16.6월)

○ **(사이버안전)** 정보보호 전담 조직·인력* 확충, 전문인력 채용 기반 구축(정보보호직류 신설), 사이버보안 인력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('16.5월)

* '13~'16년 간 정보보호 전담인력 총 213명 증원(중앙 138명, 지자체 75명)

□ 행정한류 확산

○ '15년 전자정부 수출 5억불 달성 등 '13~'15년간 총 14.3억불 수출

- 인도네시아 '전자정부협력센터' 운영, '전자정부 협력사절단' 파견(중남미 등)
-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(2,800여명), 청년·퇴직전문가 글로벌컨설턴트 육성(227명)

○ 국제사회 전자정부 선도를 위해 「Digital-5* 장관회의」 창설('14년)

- 「제3회 D5 장관회의」 부산 개최('16.11월), 「D5 부산선언문」 채택

* 한국, 영국, 뉴질랜드, 에스토니아, 이스라엘

○ 범부처 '공공행정협력단*', 우수사례 설명회**를 통한 행정한류 확산 지원

* 한-중남미('16.5월), 한-중앙아('16.8월) / ** 6회 개최, 59개국 110명 참석

3. 지방자치 분야

□ 주민 중심 생활자치 구현

○ **(지방자치 20년)** “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” 미래비전 선포 및 주민·지자체·지방의회 등 분야별 발전과제 발표(‘15년)

○ **(자치제도 개선)** 읍면동 복지허브화(624개) 및 복지·소방 인력 확충 등 주민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

-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(’16년),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(’15년)

○ **(자치역량 제고)** 지자체 기구·인력기준에 ‘인구’ 외 다양한 지표를 반영(개발수요, 사업체수 등)하여 현장 중심의 조직 설계

- 지방공무원 3·4급 승진후보자 역량교육과정 신설, 전문직위 활성화

○ **(소통·협력 강화)** ‘중앙-지방정책협의회’를 통한 국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중앙-지방간 협업 강화, 지방자치의 날 기념일 지정(’13년)

□ 지방규제 개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
○ **(규제 개혁)**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(8회), 기업 활동 저해 규제(6,400여 건)와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(7,200여 건) 정비

- 지방규제정보지도 공개(’14.9월), 사전 컨설팅 감사 全 부처 확산, 적극행정면책 등 행태규제 개선

○ **(지역 발전)** 도서·접경지역,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, 디지털 옥외광고물 허용 및 자유표시구역 도입(‘16.7월)

- 마을기업 육성*, 야시장 조성(11개), 향토명품(44개) 사업화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

* ’15년 기준 1,342개 마을기업(연매출 1,183억원, 일자리 총 11,513개)

- ‘지역경제정책협의회’ 신설(’16년), ‘새마을금고공익재단’ 출범(’16.5월)

4. 지방재정 분야

□ 지방재정 확충

○ **(재정 증대)**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중앙-지방 재원조정, 비과세·감면 지속 정비를 통해 연간 4조원 이상 지방재정 확충

○ **(세원관리 강화)** 「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」 구축('16년), 지방세외수입 운영 진단 등 충실한 세원 관리

□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제고

○ **(지방재정 조정)**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비율 단계적 확대(20%→26%),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비중 상향(25%→35%)

-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비중 확대(20%→30%), 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특례 폐지로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

○ **(투명성·효율성 제고)**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('지방재정365', '16.5월), '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'를 설치('14.12월)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강화

- 행사·축제 예산총액한도제 도입 및 사전·사후평가 실시('17년 시행),

□ 지방공공기관 혁신

○ **(부채 감축)**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 부채감축목표제 도입('14.2월) 등 지방공기업 부채 지속 감축

- '13~'15년 간 26개 중점관리기관 부채 3.7조, 부채비율 20.4%p 감소

※ 부채 ('13년) 51.4조 → ('15년) 47.7조, 부채비율 ('13년) 157.3% → ('15년) 136.9%

- 지방공기업 총부채 2년 연속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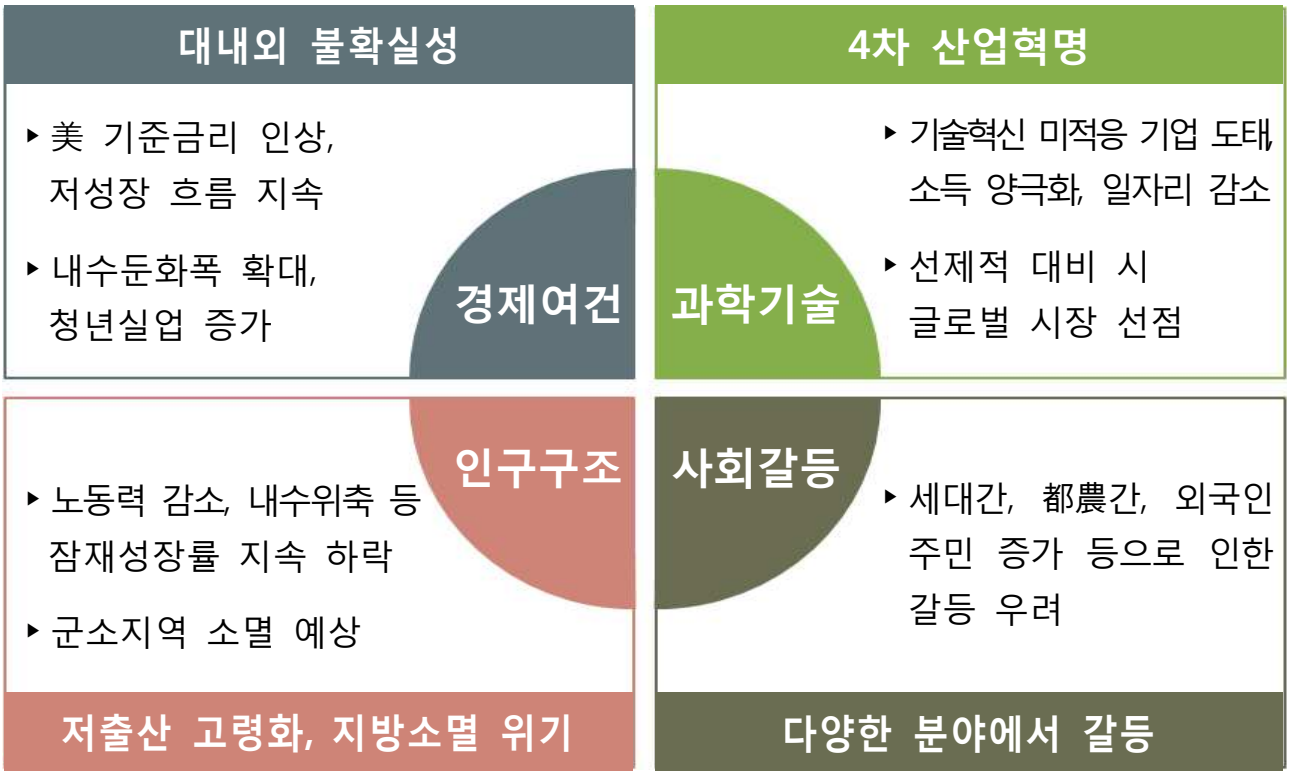
※ ('13년) 73.9조 → ('14년) 73.6조 → ('15년) 72.2조

○ **(구조 개혁)** 지방공사·공단 유사·중복기관 통폐합, 민간경제 위축 사업 민간 이양(23개 사업) 등 구조개혁('15~'16년)

- 全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1,000여개 창출

Ⅲ. 정책여건 및 목표

1. 2017년 정책여건



□ (경제 여건)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산

○ 미국·신흥국 중심으로 회복세이나, 당분간 저성장 흐름 지속 전망

- 美 연준이 기준금리를 0.25%p 인상(12.15.)하고, 내년 중 3회 인상을 전망함에 따라 금융·외환시장 변동성 확대

  * (美) 신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회복세 지속
    (브·러) 유가회복·정치불안 완화 등으로 성장률 반등
    (EU·日) '16년 수준의 성장흐름 지속 (中) 성장세 완만히 둔화

○ 가계부채 상환부담, 구조조정 영향, 부동산 활력 약화 등이 중첩되면서 내수 회복세 둔화, 가계부채·한계기업 리스크 우려

- 고용률 상승세는 지속되나 구조조정 영향, 내수 둔화 등으로 고용창출력 약화 우려, 특히 청년실업률* 증가 우려

  * 청년실업률(11월 기준, %) : ('12) 6.7 → ('13) 7.5 → ('14) 7.9 → ('15) 8.1 → ('16) 8.2

□ (과학 기술)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

○ 기술혁신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고, 개인은 기술 숙련도에 따라 소득이 양극화되어 중산층 공동화 우려

-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 전 세계적으로 500만개 일자리 순감 (2016 WEF 미래고용보고서)

○ 기술·제품이 생산되면 빠르게 전 세계로 전파되어 소수 기업의 시장 독점 가능(2016 다보스포럼)

- 기술개발과 교육·훈련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모멘텀 강화 가능(UBS 4차 산업혁명 영향분석)

□ (인구 구조) 저출산 고령화, 지방소멸 위기

○ 지난 15년 간 합계출산율* 1.3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, 평균수명의 꾸준한 증가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

- 노동력 감소, 노동생산성 저하, 내수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우려

* ('01년)1.3명 → ('05년)1.08명 → ('15년)1.24명
'01년부터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기록

○ 30년 내 228개 시·군 중 84개, 3,482개 읍·면·동 중 1,383개(39.7%) 소멸 전망(한국고용정보원, '16.10)

-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정범위,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

□ (사회 갈등) 다양한 이해집단 간 발생

○ 부양부담에 따른 세대 간 갈등, 도시 밀집·농촌 과소화로 인한 지역 갈등, 외국인주민 증가 등으로 인한 갈등 유발 우려

2. 정책 목표

국민 맞춤형 정부,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

국민 생활 속 정부 3.0 실현	①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 ② 국민참여 활성화 및 행정 효율화 ③ 공공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
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조직관리	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조직관리 ②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탄력적 인력 운영 ③ 안정적인 정부운영 지원
미래 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	① 인공지능형 전자정부 기반 구축 ② 하나로 연결된 정부, 「One-Government」 구현 ③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전 강화 ④ 행정한류의 글로벌 확산
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	① 인구감소지역 新발전방안 마련 ② 지방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③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 ④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⑤ 지역사회 통합·상생모델 정착
지방재정 안정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	① 지방재정의 건전성·투명성 강화 ② 지방재정 확충 및 납세편의 향상 ③ 지역경제 거버넌스 구축 및 성장동력 확보 ④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

Ⅳ. 2017년 중점 추진과제

【국민 생활 속 정부3.0 실현】

1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

2 국민참여 활성화 및 행정 효율화

3 공공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

과제1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

◇ 생애주기별로 국민생활 밀접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, 공유·협업을 통한 국민불편 최소화

□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

○ 「**이사편리**」, 「**혼인착착**」 원스톱 서비스 **신규 도입**

- 혼인·전입신고 시, 공공·금융 등 주소변경 및 각종 지원서비스 통합신청

○ 창업준비에서 사업자 등록까지 편리하게 진행되는 「**간편창업**」

※ 창업자금 지원서류 감축, 인허가영업신고-사업자등록 1회 방문처리 등

○ 「**행복출산**」, 「**안심상속**」 등 생애주기 서비스 **원스톱 대상 확대**, 서비스 **신청 온라인 化**

□ 정보공유 확대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

○ 초중등학교 **전·입학** 시 필요한 **서류***를 별도로 **제출하지 않도록** 학교에서 관련 정보 직접 확인

* 구비서류 : 주민등록정보, 외국인등록정보, 출입국정보 등

○ 신용카드사 등 **여신금융회사와 정보공유**를 **확대**하여 구비서류 감축

○ 체육·문화시설, 화장장 등 **공공시설 사용 온라인 신청** 시 **요금**을 **바로 감면***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

*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 등 법정할인 대상자 자격여부 바로 확인

○ 구비서류·처리기간 단축 등 자치민원의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**'자치민원처리기준표'** 마련, **'자치민원 사전영향평가제'** 도입

□ 부처 간 협업·연계 서비스 제공

○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각각 제공받던 서비스를 「**다문화이주민⁺센터**」('17년 12개)를 통해 **한 곳에서 이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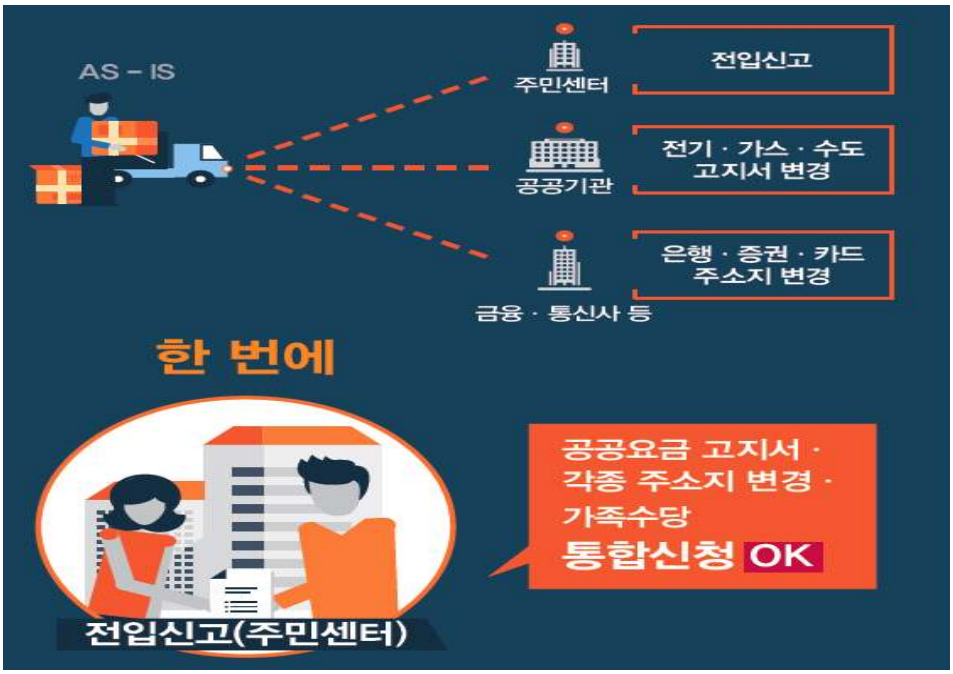
※ 수혜대상 : 다문화가족, 외국인 근로자·유학생 등 210만 명

○ **고용복지⁺센터 30개소** 신규 설치(총 100개소)

참고 | **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사례**

□「이사편리」서비스

○ 전입신고와 함께 공공·금융기관, 통신사 등 주소지 변경 통합신청



□ 「다문화이주민⁺센터」

○ 다문화·외국인 유형에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·민원 한 곳에서 해결



과제2 국민참여 활성화 및 행정 효율화

◇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, 언제·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하는 스마트·모바일 업무환경 구현

□ 국민참여 활성화 기반 강화

○ **국민참여 대표플랫폼**을 **구축***하고, **민간 플랫폼과 연계**

* 생활공감국민행복시스템(happylife.go.kr)과 국민디자인·재능기부마켓플레이스 등 연계·통합

○ 국민참여 절차, IT 활용 참여방식 등을 반영하여 「**행정절차법**」 **개정**

○ 생활 속 불편을 손쉽게 신고하고, 처리결과를 바로 알 수 있도록 **'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'**와 **민간 SNS 연계**

○ 민·관, 중앙·지자체 등 기관 간 협업형 국민디자인 과제 발굴·확산

□ 일하는 방식 혁신

○ **챗봇**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 시범 제공*, **스마트오피스** 등 사무공간 혁신

* 차량등록·상수도·여권 분야 등 정형화된 서비스부터 시범 도입

○ 시공간을 뛰어넘어 **언제·어디서**나 **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** 구축

- **모바일 전자결재** 범위 확대(31% → 94%), **업무메일 모바일** 서비스, 스마트워크센터 지역거점센터(17개) 마련 등

□ 정부3.0 성과 국민 체감도 제고

○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3.0 성과 **대표브랜드** 선정, 체험박람회 등 개최

○ UN·OECD 등 국제기구와 함께 정부혁신 사례 공유 등 글로벌 확산,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전략 마련(연구용역 추진)

과제3 공공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

◇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서비스에 대한 정부 활용을 활성화하여 창업과 新산업 발전 본격적으로 지원

□ 융합형·지능형 고품질데이터 개방 확대

○ 민간데이터와 **융합*이 용이한 공공데이터**를 **우선 개방**하고, 민-관 데이터의 결합 및 정제 지원

* (사례) 자동차 정기검사 정보(공공)와 중고차시장 거래 정보(민간) 융합 공개

○ **새로운 유형**(IoT센서, 인공지능 등)의 **공공데이터 개방전략 수립**

※ (IoT 센서데이터) 전력소비량, 지진 분석정보, 교통사고 위치정보

□ 新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

○ 高성장이 전망되는 **新산업 공공데이터 지원계획** 수립, 산업별 **'플래그십 프로젝트'** 선정·지원

- 자율주행, 헬스케어(AI), 가상·증강현실(VR·AR) 등 3대 분야 시범사업 추진

○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**'창업샘터' 모델 확산**

- 공공기관이 유휴공간·창업자금 등을 제공하고, 지자체·창조경제혁신센터는 컨설팅 지원

□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

○ 데이터 생애주기별 품질관리 범위* 확대, 기업이 요구하는 품질수준 제공

- 개방표준(100개) 및 오픈포맷 비중(70%) 확대를 통한 품질 강화

* (기존) 데이터 개방 → (확대) 데이터 생성·수집축적·개방·융합분석 등

○ **'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**(5등급)' **확산**

□ 민간 데이터·서비스의 공공활용 확대

○ 손쉬운 앱 개발 환경을 제공하여 **국민주도 앱** 서비스 **개발**(DIY) 활성화

○ 양질의 민간데이터 공동활용, 우수 민간서비스·플랫폼 공공기관 활용 강화

【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조직 관리】

1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조직관리

2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탄력적 인력 운영

3 안정적인 정부운영 지원

과제1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조직관리

◇ 국민 수요에 대응하여 조직·인력을 설계하고, 진단·평가를 통한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

□ 문제해결형 선제적 조직관리 강화

○ **저출산·재난·정보보안** 등 **국가현안** 및 사회 이슈에 대해 **수요자 관점**의 선제적 진단으로 미래 지향적 **조직·기능 재설계**

○ 개별부처 요구 중심의 **칸막이형** 조직관리를 **탈피**, 다수 부처 관련 사항과 중앙·지방·민간을 연계하는 **협업형 조직관리** 방식 적용

-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부처 공동 기구·인력 요구 절차 마련

  * (예시) 생활화학 안전관리(식약처·환경·복지·산업부), AI 및 가축방역 체계(농식품부·지자체), 사이버보안 대응체계(전 부처) 개선 등

- 중앙(정책)-지방(현장)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지방조직 기능 분석·정비

□ 투명한 조직관리 기반 구축

○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「**민간위탁기본법**」 **제정**

- 독점위탁 제한, 성과평가 강화, 일몰제 도입 등 위탁 운영 내실화

○ '**신설기구 성과 평가제**(2년 경과조직)' **본격 실시**로 업무수요·성과에 따른 존치 여부 엄격 심사

○ 기구 신설·개편, 인력 변동 등 **조직관리 全 과정**을 **온라인化**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 **대국민 공개**

□ 조직관리 자율성·책임성 강화

○ 정부 인력운용 **칸막이 해소** 및 조직 관리 **통일성 강화**

- 외무·경찰·교원 등 특정직공무원도 일반부처 실·국·과장에 보임

- **모든 중앙행정기관 설치근거**를 **정부조직법**에 **명시**, 국민 알권리 제고 및 행정기관 남설 방지

○ **위원회 운영 평가 강화***를 통한 부실 위원회 지속 정비

  * 회의개최 실적 외에 정책반영도, 현장활동, 직무윤리 규정 도입 등 종합평가

과제2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탄력적 인력 운영

◇ 청년 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탄력적 정부 인력운영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

□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

○ 사회적 서비스 확충 등 **공공부문 일자리 1만 명** 이상 **증원**

✓ 민생 치안,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경찰·해경·소방 3,600여 명
✓ 유아교육 및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치원·특수교사 630여 명
✓ 읍·면·동 복지 허브화와 연계, 사회복지 인력 등 현장인력 2,300여 명
✓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입국 관리 인력(CIQ), 서해5도 특별경비단, 고용복지+센터 등 2천 명 이상

○ 청년 일자리 창출,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'17년 증원 예정 인력을 **1분기 내 조기 배정**

※ '17년 증원 확정된 3,397명 중 2,236명(66%)을 3월 내 정원 배정

□ 일 · 가정 양립문화 확산 지원

○ 경력단절 여성 등의 채용을 위한 **시간선택제 적합 직위** 대폭 확대

- 일정규모 이상 인력 증원 시 시간선택제 직위 발굴 의무화

※ 출입국, 세무·민원 상담, 고용센터, 특허심사 등 100개 이상 확대

○ 실태점검, 컨설팅을 통해 **육아휴직 별도정원 활용률** 제고('15년 81.5%)

□ 인력관리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

○ 경직적인 계급별 정원배정 방식을 탈피, **직무특성**에 따라 일정 **계급 구간**을 부처가 **자율 운영**하는 **'정원 통합관리'** 시범도입

* '17년 도입예정인 전문직 공무원(수석전문관, 전문관)부터 통합관리 적용

○ 정원진단과 연계하여 기능축소 분야의 인력을 활용, 국정·협업과제 등에 재배치

과제3 안정적인 정부운영 지원

□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의전 · 정부포상

○ 국경일 경축행사가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·전문가 협업을 통한 행사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

- 국민추천포상자·우수 납세자·자원봉사자·다문화가정·초중고 학생 등 다양한 국민 초청, 국민화합의 장(場) 마련

○ **관행적·유사중복 포상 정비**, 공무원 포상 신설 제한, 일반 국민에 대한 포상비율 점진적 확대

□ 안전한 정부청사 관리

○ 청사 출입게이트에 **얼굴인식시스템 도입** 등 출입보안 강화, 청사 외곽에 CCTV(239대)·울타리감지기(136개소) 등 보안시설 확충

○ 방호관·특수경비원 대상 보안교육, 청사경비대 합동훈련 및 청사 모의침투훈련 실시

□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전자기록관리 기반 구축

○ 클라우드 행정환경에 대비한 「공공기록물법령」 및 「기록관리시스템 표준·지침」 정비, 관련 시스템 개선

○ 공공데이터 기록관리모델 마련, 디지털 기록 '기술정보 은행*' 구축 등 전자기록물 장기보존·활용 기반 조성

* 현재 전자기록을 100년 후에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정보 DB 구축

□ 정확한 과학감정시스템 정립

○ **법의관 현장검안 확대, DNA 긴급감정실 운영**, '원격 디지털 감정 시스템(U-Forensic)' 확산 등 현장 중심 감정 추진

○ 감정표준절차 재정립 및 재감정시 최초 감정관 배제 등을 통한 **감정오류 최소화**, '국제공인기관' 지위 유지로 감정 신뢰성 제고

【미래 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】

1 인공지능형 전자정부 기반 구축

2 하나로 연결된 정부, 「One-Government」 구현

3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전 강화

4 행정한류의 글로벌 확산

과제1 인공지능형 전자정부 기반 구축

◇ 전자정부 50년을 진단·평가하고, AI·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전자정부 패러다임으로 전환

□ 전자정부 미래비전 선포

○ **전자정부 50년**(1967*~2017) 성과를 평가하고, **미래비전 선포**(상반기)

* 경제기획원에서 인구센서스 통계를 위해 IBM 1401을 도입한 것이 시작

○ 지능형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**'10대 사업'** 선정·추진

- 민원·건강·환경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

□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

○ 중요 정책 관련성과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**'국가마스터데이터'**로 지정, 데이터 표준화·매핑 등 총괄 관리체계 마련

- **「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」 제정 추진** 등 법적 기반 확립

○ 생활밀접 빅데이터 분석 사례 발굴* 및 우수사례 표준화·확산

* 아파트 관리비 부조리 방지('15), 의료데이터 기반 질병 예측('16) 등

○ 빅데이터 공통기반시스템('혜안') 이용환경 개선* 및 컨설팅 지원

* 시군구 이슈분석, 질의응답 분석서비스 기능 추가 등

□ 미래형 도시 「스마트 시티」 구현

○ 도시화 정도, 지리적 특성, 인구규모 등을 고려한 **유형별 스마트 시티 모델 구축**, 시범도시 조성(국토부·미래부·지자체 협업)

○ AI · IoT 기술 융합과 공공 사물인터넷망(G-IoT Network)을 통한 범죄·안전사고 예방* 등 국민 일상생활에 획기적인 변화 유도

* (예시) CCTV통합관제 지능화로 효과적 관제 강화

○ 신기술 적용 확대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해외수출 지원

과제2 하나로 연결된 정부, 「One-Government」 구현

◇ 국민이 번거로움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, 범정부 통합적 전자정부 추진으로 효율성·서비스수준 제고

□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정부서비스 이용

○ 부처별 분산된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단일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**'정부대표포털'** 중심으로 통합·연계

- 정책정보 통합 검색기능 구현,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등

○ 한 개의 회원ID, 1회 본인확인 인증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**'디지털원패스' 도입**

- 공인인증서 위주 인증체계에서 모바일·생체인증 등 인증수단 다양화

□ 범부처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확립

○ 체계적 성과관리로 범정부적 전자정부서비스 수준향상 및 예산효율화

- 全 정부기관 대상 전자정부 성과평가 실시
- 지역별 정보화 수준진단 모델 정립 및 진단 실시

□ 개별정보통신망을 「국가 융합망」으로 통합

○ 국가 융합망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효율화와 예산 절감, 통신 트래픽·장애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

※ '18~'28년 간 5,248억 통신비 절감 예상, 보안 강화 등 효과

□ 중단 없는(Down-free) 정부 홈페이지 실현

○ 정부 홈페이지 관리에 **오토스케일링 기술**을 **단계적**으로 **도입**하여 일시적 접속량 증가에도 국민들이 중단 없는 서비스 이용 가능

○ 웹사이트 구축·운영 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수준진단 근거 마련

※ 행정기관 웹사이트에 적용 가능한 최적화 기술 연구 및 기준 마련

과제3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전 강화

◇ 영상정보 등 ICT 신기술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는 보안역량 강화

□ ICT 신기술 대응 개인정보 보호 강화

○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*를 규율하는 「**개인영상정보 보호법**」 제정

- 안내판·소리·불빛 등을 통해 영상정보 수집 사실 표시, 열람·보관·삭제 요구권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강화

* 고정형(CCTV, 네트워크 카메라), 이동형(스마트 안경·시계, 웨어러블, 블랙박스) 등

○ IoT 등 자동처리장치에 의한 **개인정보 침해방지 가이드라인** 마련

-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고려 의무화, 개인정보 유출시 책임소재 및 피해구제 방법 명확화, 생체정보 활용 기준 등

○ 빅데이터, 생체인식 등 신기술 적용 **비정형 정보 점검방안** 마련

□ 국제협력 및 자율규제 활성화

○ 개인정보 **국외이전 시 보호제도*** 강화, **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**(KISA) 설치·운영

* 보호수준 준수 검증을 통해 국외이전 허용, 역외적용 규정 도입 검토

○ EU 개인정보보호법(GDPR) 가이드라인 마련, APEC CBPR 가입 추진

○ **자율규제단체 확대**(7개 → 12개), 개인정보 대량취급 사업장 중점 관리

○ **스팸**성 전화·문자·메일 **수신거부 간편화***로 국민불편 해소

* 수신자에게 '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' 안내, 조치방법 제시 의무화

□ 사이버 안전 강화

○ 사이버위협에 자동분석·대응할 수 있는 **차세대 보안체계** 구축('17년 ISP)

○ SW 설계단계부터 개발보안 의무화, 부처·지자체 침해대응 통합관리

과제4 행정한류의 글로벌 확산

◇ 우리나라의 우수 행정경험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교류·협력 체계를 강화하고, 전자정부·행정혁신의 선도국가로서 위상 공고화

□ 체계적인 행정한류 확산모델 개발

○ 한-중미, 한-아세안 등 **권역별 네트워크** 강화

- 한-SICA(중미국가연합)행정장관회의 개최, 한-아세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
- 다자개발은행 자금을 활용하여 행정한류 협력사업 지속 지원

○ UN, OECD, UNESCO, 'Digital-5 장관회의' 등 국제협력 플랫폼 활용 확대

□ 전자정부 수출 지원 확대

○ 수출 집중 지원국가를 선정하여 **글로벌 5대 전진기지*** 구축

- 전자정부 협력센터, 초청연수, 컨설팅, 포럼 등 협력수단 집중

* △(동남아)인니 협력센터(운영 중) △(중남미·아프리카) 페루·케냐 협력센터(상반기 개소), △(유럽)EU집행위·OECD·프랑스 △(중앙아)키르기즈 MOU, 카자흐

○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**글로벌 컨설턴트 육성**(150명), 해외협력 요청이 많은 각 부처 전자정부 시스템 해외진출 지원

□ 글로벌 새마을운동 등 우수 행정경험 확산

○ 범정부 새마을교육 통합 관리 및 대상별*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

* 고위급, 중간관리자·일선공무원, 새마을지도자·마을주민

○ 수원국 새마을운동 추진여건 진단을 위한 새마을운동지수(SMU Index) 개발 및 국가별 마스터플랜 수립

○ 기록관리시스템, 생체인식·디지털포렌식 등 우수 시스템 세계 전파

【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】

1 인구감소지역 新발전방안 마련

2 지방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혁신

3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

4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

5 지역사회 통합·상생모델 정착

과제1 인구감소지역 新발전방안 마련

◇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 마련

□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추진기반 구축

○ 정주여건 개선, 인구유입 촉진 등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**컨트롤타워 구축 검토**, 범부처·지자체 협력* 추진

* 각 중앙부처 및 시·도별 계획을 종합, 정부차원의 '인구감소지역 발전계획' 수립

○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·절차 및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

□ 정주공간 개선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보장

○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육·문화·복지·교통 등 **생활기반시설 조성**

○ 배후마을을 연계하여 **거점마을 조성**, 공공·근린생활시설 집중·재배치

□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혁신

○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신규 생활서비스 발굴, 우체국·물류회사·지역농협 등이 참여하는 서비스제공 협업시스템 구축

○ 인구감소지역 행정수요를 고려, 행정기관의 기능 재조정과 권역별 공공시설 공동 설치를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 효율화

□ 지역의 내재적 역량 강화

○ 지역기금 활용,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교부세 개선 등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재정기반 강화

○ 도시에서 이주한 청년 등의 지역 정착 및 지역사회 기여활동 지원 (가칭 '지역희망뿌리단' 선발)

과제2 지방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혁신

◇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과 주민이 함께하는 생활자치 구현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

□ 공유·연계·협업하는 지방행정체계 구축

○ 지자체 간 연계사무 추진을 위한 **협업조직 설계** 및 **시설·인력 공동 활용***

* 행정수요·여건 변화에 따라 지자체 간 정원 이체·조정 활성화

○ **행정협의회*** **활성화**, 지자체·특행기관·공공기관 협업 촉진을 위한 '지방행정-공공기관 협의회' 설치

* 2개 이상 지자체와 관련된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구성(지방자치법 제152조)

○ **대규모 개발 시 지자체 간 사전 경계조정 제도화**, 수질·환경·혐오시설 설치 시 관련 지자체 간 협약제도 도입

□ 행정서비스 전달조직 효율화

○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진단·컨설팅(年 25개), 대도시 사무특례 확대 및 맞춤형 조직개편 방안 마련

○ 일자리·안전·인허가 기능을 강화한 '**권역형 복지허브화**' **추진**

- 주민생활 밀착기능은 읍면동으로, 전문적인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읍면동-시·군·구 간 기능 재조정

□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제도 개선

○ 복지·문화·생활안전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'주민자치회' 활성화 지원

○ 지자체 하부 지원조직으로서 **이·통장 기능·업무 수행방식 개선 검토**

○ 외국인배우자 주민 등록과 해외체류자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법령 개정, 불필요한 주민등록정보(등·초본) 요구 법령 일괄 정비

과제3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

◇ 지자체별 맞춤형 지역발전사업과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여 역동적이고 생기 있는 지역공동체 조성

□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

○ 중장기 **마스터플랜 수립** 및 「**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**」 **제정 추진**

○ 범부처 '지역공동체 정책협의회*' 및 지자체 전담조직 신설 등 중앙-지방 추진체계 정비

*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요 정책·사업 심의, 중앙부처 공동체정책 연계·조정

○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한 **지역재단*** **설립** 활성화, **공동체 기금 설치 검토** 등 재원기반 확충

*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, 복지·환경 등 지역현안 해결

□ 지자체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

○ 임신-출산-보육-보건 **원스톱서비스** 제공을 위한 **지역거점센터 구축**

○ 빅데이터를 활용한 '**저출산 지역인구진단 표준프레임***' **개발** 및 지자체 컨설팅 실시, **지역별 맞춤형 정책 발굴** 지원

* 결혼·출산·가임기 여성·청년층 인구 유출입 등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지자체가 지역 인구 상황 및 추이를 진단할 수 있는 표준모델

○ 지자체별 저출산 관련 우수 정책사례 발굴·확산(경진대회 개최)

□ 지역 맞춤형 발전모델 정립

○ 주민밀착형 지역특화사업 발굴, 주민 생태·안보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**지역발전 4大 종합발전계획*** 수립

*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('11~'30년), 제4차 도서종합발전계획('18~'27년),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('18~'27년), 서해5도 발전종합계획('11~'20년)

○ 정서상 특별한 애착이 있는 '고향'을 방문하여 봉사·기부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'**고향희망심기**' 사업 **추진**

과제4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

◇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자체·지방의회·지방공무원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강화

□ 지자체 자치역량 제고

○ 법령 제·개정 시 **지방사무배분**의 **적정성** 사전 **검토**

○ 지방의회에 **'지방예산정책센터'**를 **신설**하여 재정 감시기능 강화,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'**지방의정연수센터**(지방행정연수원)' **구축 검토**

○ 지자체 평가 시 국가 중요 시책·미래선도 지표* 반영, 실시간정보 업데이트 등 **지자체 평가체계 혁신**

* 4차 산업혁명 관련 전기차 보급,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책 등

□ 일 잘하는 지방공무원 양성

○ 재난·질병관리 등 특정 분야에 대한 **전문직공무원제 도입**, **전문직위제도 확대 등**을 통해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

○ 직위·직무 중심 교육 도입, 과장급 이상 공무원 역량평가 실시를 위한 「**역량센터**」 **신설** 등 지방공무원 교육 개편

□ 지속적인 지방규제 혁신

○ 지방규제 심사 절차 정비,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근거 신설 등 지방규제개혁의 제도적 기반 강화

○ 낙후 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거점을 육성하는 「**걷어내는 규제,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***」 추진

* (예) 규제 완화를 통해 방치된 산업시설 부지를 복합전시관으로 재활용

과제5 지역사회 통합 · 상생모델 정착

◇ 중앙과 지방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갈등을 조기 해결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

□ 중앙 · 지방 상생협력 강화

○ **'찾아가는 시·도 정책 간담회'**를 통해 지역 현안·애로사항 파악, 실질적인 문제해결 도모

○ 중앙·지방 정책협의회 내실화, 온라인 소통채널 개설,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정운영 통합성 제고 및 협력 증진

□ 지역사회 통합과 갈등 해소

○ 북한이탈주민·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, 지자체 **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** 추진

- 집중거주마을 환경 개선, 취업교육 지원,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지원

○ 갈등관리위원회·시민배심원제 등 자체 갈등조정기구 활성화, 갈등 조기인지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자체의 갈등·분쟁 관리역량 제고

□ 자원봉사 · 나눔문화 확산

○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굴 및 언론 홍보, 평창 올림픽과 연계하여 **'2017 한국자원봉사의 해' 국민참여 캠페인** 추진

○ 재능기부·온라인 자원봉사 등 자원봉사 범위 확대, 1365포털 개선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

○ 재난재해·올림픽 등 국가적 현안에 국민운동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, 사회공헌 기능 강화

【지방재정 안정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】

1 지방재정의 건전성·투명성 강화

2 지방재정 확충 및 납세편의 향상

3 지역경제 거버넌스 구축 및 성장동력 확보

4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

과제1 지방재정의 건전성 · 투명성 강화

◇ 지방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,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

□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체계 확립

○ 재정지출 수반 조례안 제출 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는 **'페이고(pay-go)' 원칙 도입** 등 재정준칙 확립

○ 지자체 재정이 여유 있을 때 저축하고 어려울 때 사용하는 **「재정안정화기금」 도입**,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 제고

○ 부실한 지방출자·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진단·경영개선명령 제도 개선 등 지방공공기관 관리 사각지대 해소

□ 주민참여 · 공개 확대

○ **지방재정정보 공개 확대 및 시스템 개편**

- 도로건설·주차장 관리·쓰레기처리 원가, 대규모 투자 사업 진행상황 등 주민 관심이 높은 재정정보 추가 공개
- 지자체별 재정정보 비교·분석기능 보완, 주민이 알기 쉬운 맵·파이 등 시각 콘텐츠 제공

○ **「주민참여예산위원회」 설치 의무화,** 「내세금 국민 감시단」 활성화, 「예산 낭비신고센터」 채널 온라인까지 확대

□ 지방회계 · 계약 투명성 제고

○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집행 관리 및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**'지방보조금 회계관리시스템'** 구축 추진

○ 입찰·계약 오류 사전 방지, 법적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

과제2 지방재정 확충 및 납세편의 향상

◇ 지방재정 확충기반을 마련하고, 주민이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 지속 개선

□ 지방세입 등 재정기반 강화

○ 복지수요 등 지출 증가,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대비,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확충 검토

○ 환경오염·주민불편 등 외부불경제 유발 행위 중심으로 **신세원 발굴 검토**

○ 지방세 신규 감면(100억 이상) 시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평가 실시

○ 지자체가 개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세외수입*을 '표준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'으로 통합, 세외수입 부과·징수 체계적 관리

* 주정차위반과태료·환경개선부담금·교통유발부담금

□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

○ **기관 간 정보공유**를 통해 **지방세 체납징수** 확대

- 외국인 체납정보 공유(법무부),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전산조회*(금융위)

* 과거 우편과 종이문서에 의존하던 체납자 금융정보를 전산을 통해 실시간 조회

○ **지방세외수입** 체납자에 대한 **관허사업 제한**, 지자체 간 **징수 촉탁, 전담징수반 운영** 등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

□ 주민이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

○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, 효율적인 세정업무 지원 등을 위해 최신 IT기술을 반영*한 「**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(위택스)**」 **설계**

* 클라우드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(IoT) 등에 기반을 둔 플랫폼 설계(BPR/ISP)

○ 스마트폰을 통한 지방세 전자고지 확대, **간편결제** 서비스* **도입 검토**

* (현행) 신용카드 6개사 앱카드 → (확대) 통신사·IT업체의 "00페이" 서비스

○ 지방세에 대한 **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** 실시

과제3 지역경제 거버넌스 구축 및 성장동력 확보

◇ 지역별 경제 현안과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

□ 지역경제 현안 및 위기대응 강화

○ 지역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**협치체계 구축**(중앙정부-지자체-지역 연구기관-기업)

○ 지역경제 위기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으로 '현장대응형 지역경제정책협의회' 구성, **범정부 종합대책 마련**

* 현장대응형 지역경제정책협의회 → 종합안건 마련 →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상정

○ 주요 지역현안 통계* 및 3대 지역통계** 산출 지원 통해 지역경제 정책 수립 기반 마련

* 전통시장· 상점가 동향, 일자리인식 실태, 관광 실태, 특화농산물 조사 등

** GRDP, 장래인구추계, 지역사회조사

□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

○ 도시재생사업 등 **지역전략산업** 및 **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**에 대한 **투자심사 간소화**(심사항목 일부 생략, 최대 6개월 단축)

○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개방, 지자체·지방공기업의 전기자동차 의무구매 확대 등 미래에너지 新산업 활성화 지원

○ 공유재산 임대·매각정보 **통합공개**, 공유재산 임대 시 '최고가' 대신 **'지역경제영향평가***'를 통한 낙찰자 결정

* 가격 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종합 고려

□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재정정책 적기 추진

○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**「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단」** 구성, 재정집행 관련 절차 등 현장 애로사항 해소

○ **SOC 사업**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자체 사업에 대해 **'성립 전 예산집행', '선금집행 활성화'** 등 신속집행제도 활용 독려

과제4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

◇ 소상공인과 청년고용 지원을 통해 작지만 따뜻한 민생경제 실현

□ 「작은 경제」 자립 기반 마련

○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('15년 96조) 방지, 역내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**'지역순환 금융체계*'** 구축

* (해외사례) 일본 히로시마현은 지자체·금융기관·NGO 협업으로 투자펀드를 조성, 사업자 자금지원 및 출자기업 경영컨설팅 실시

-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통채널 다양화, 근거규정 마련

○ 마을회관·의용소방대 건물 등 유휴시설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제공하는 「**도시형 마을공방**」 **조성('17년 5개소)**

○ **예비마을기업 육성***, 나라장터·면세점 등 온·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해 마을기업의 자생력 강화

* 마을기업 희망 기업 대상으로 사전 교육·컨설팅 실시, 보조금 지원

□ 소상공인 지원

○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"찾아가는 마을세무사" 확대

※ 동일 지역의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간 상호안내 및 연계 강화

○ 중금리(6~7%)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

○ 소상공인의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 금융교육

※ 새마을금고-금감원-민간교육단체와 MOU체결, 우수한 금융전문강사 교육지원

□ 청년고용 지원

○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규모에 따라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'수의계약 쿠폰제' 도입으로 지역 청년고용 확대

○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특별교부세 중점 지원*

* 일자리 창출 관련 지역현안 사업: '16년 33%(1,420억) → '17년 35%이상